

머리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2012년판 ‘심의결정집’을 내놓습니다. 통산 제51호입니다.

올해 심의결정집에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간에 한국신문협회 회원사들과 비회원사로서 신문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한 회사들이 발행한 일간신문의 기사와 광고들 중에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윤리위원회가 해마다 심의결정집을 내놓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언론매체인 신문들이 기사와 광고를 통해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결정집이 그 실체를 온전히 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근접하게 담은 기록임은 분명합니다.

지난 회기에는 기사 546건(결정 이유 691건), 광고 910건(결정 이유 2014건)의 심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내용을 결정 이유별로 보면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173건), ‘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73건),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69건), ‘답변의 기회’(54건), ‘표제의 원칙’(28건),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22건), ‘자살보도의 신중’(16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보호’(12건),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10건) 등입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규제 관련 15개 조항별로 보면 저작권 관련 조항인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제8조) 부문 제재가 모두 2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 윤리를 위한 최소 수칙인 ‘보도준칙’(제3조) 부문 제재가 254건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마다 결정집을 통해 나타나는 통계 수치들이 반드시 상황의 개선 또는 악화라는 어느 한 방향으로의 일관된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해도 윤리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문의 위반이 몇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문윤리위원회는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부문에서의 제재 사례가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 부문의 제재 건수는 2009년 관련 심의를 대폭 강화했을 때 5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해에는 155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2011년 225건, 올해 264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부문에서 저작권 위반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신문들이 스스로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문제의 당사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신문계에 종사하는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사례는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이 사례들은 절대 다수가 홍보성 기사이거나 기사+광고 식으로 광고 수주를 겨냥해 지면을 제작한 사례들입니다.

이는 경제난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신문업계의 경영난을 반영하는 것이겠으나 신문 제작의 정도로 볼 때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광고 관련 제재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올해 광고 관련 제재 건수(910건)는 과거 3년의 수치(2009년 239건, 2010년 410건, 2011년 186건)에 비해 폭증한 수치입니다. 제재 이유로 본 수치도 2009년 588건, 2010년 727건, 2011년 351건과 비교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제재 이유별로는 법규위반광고가 7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책임소재 불명 광고 523건, 허위광고 449건, 과대광고 24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재는 매달 같은 신문에 한달 동안 게재된 동일한 광고 중 한 건에만 내려지므로 실제로 지면에 실린 이러한 광고들은 위에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신문계는 기사와 광고를 통해 드러난 신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자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고, 그것이 신문의 공신력과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신문윤리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리위원들과 심의에 열성을 다하신 심의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분들의 수고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8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고 현 철